

李-부시 내년 3월 첫 정상회담

백악관·캠프 데이비드案 검토...부시 여름 답방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취임 후 이른 시일내 미국을 방문토록 초청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실무차원에서 첫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대한 검토 및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 일각에서 첫 정상회담 장소로 백악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 휴양지인 메릴랜드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사여부가 주목된다.

이 당선자의 첫 미국 방문 및 정상회담 개최시기와 관련, 이 당선자의 취임식(2월 25일)과 내년 4월 한국 18대 국회의원 총선, 부시 대통령의 내년 여름 일본 및 중국 방문 등을 감안해 내년 3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3월 이 당선자가 미국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내년 7월 부시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참석

할 때 또는 내년 8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때 한국을 답방하는 방안도 아울러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관련, 미 행정부 국방부와 국무부 일각에서 50여년 넘게 지속돼온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감안해 백악관이 아닌 메릴랜드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 행정부 일각에선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첫 정상회담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는 신중론

도 나오고 있다고 한 외교소식통을 전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내 주요 부서간 실무협의 및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의 검토를 거쳐 한국 정부 및 이 당선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형식 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6월 30일 총리가 된 뒤 첫 미국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는 물론, 올해 4월 27일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의 첫 미일정상회담을 캠프 데이비드에서 각각 개최하며 양국간 우의를 다진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바르고 믿을 수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

박근혜 前대표 연하장

대선 이후 공식 활동을 자제해 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더욱 바르고 믿을 수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3일 경선 기간 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 의원 및 관계자, 지인들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지나온 2007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사랑을 받았던 한해였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2008년 새해,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 측근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도와주신 분들을 비롯해 후원회 등 평소 매년 인사를 드리는 분들에게 연말연시를 맞아 보내는 통상적 연하장”이라며 “카드는 1만여통 정도 발송했으며, 이외 다른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는 조용한 연말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27일에는 한국언론인연합회에서 시상하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식에도 참석한다.

이 후보자측 일각에서 주장하고 나선 ‘당·정·청 일체’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쿠웨이트 다이만부대 “메리 크리스마스” 열사의 땅 쿠웨이트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은 공군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부대)의 정비대장 박근석 중령이 사막의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뒤 장병들과 주둔 다국군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당선자 BBK 사건 국민에 해명해야”

晨 ‘보수 신당’ 이념 노선 공개...창당 박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3일 BBK 특검법과 관련,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매우 미흡했고 국민 60% 가량이 믿지 못하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그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중구 남대문로 단암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BBK 특검법과 관련, (한나라당이)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는 듣기에 거

북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BBK 특검법으로 이 당선자가 당선 이후에도 혼란스런 상황에 빠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재는 또 내년 4·9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서두르고 있는 보수신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노선을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신당의 기본이념으로

▲자유주의(Liberalism)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를 제시했다.

그는 신당 창당 로드맵이나 영입 인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강삼재 전 전략기획팀장이 창당 작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명으로는 자유·국제·공동체주의라는 신당의 기본이념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고민 중이며, 일각에서는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집단지도체제를 한다는 의미의 회의를 합친 ‘자유회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꼬인 북핵...신고 시한 임박

북핵 협상 ‘알루미늄 튜브’ 변수...北 해명 없을 땐 과국 우려

한 동안 순항하던 북한 핵협상에 ‘알루미늄 튜브’ 변수가 돌출했다. 북한이 ‘결핵’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에 건넨 알루미늄 튜브에서 농축 우라늄의 흔적이 발견되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과학자들은 북한이 일반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미국에 건넨 알루미늄 튜브를 정밀 검사한 결과, 농축 우라늄의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농축 우라늄의 흔적이 다른 설비나 사람에 의해 묻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태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북미간의 또 다른 실랑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꼬이는 북핵 신고=북한은 10·3 합의에 따라 영변핵시설의 불능화와 함께 연말까지 모든 핵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마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은 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물밑 협상을 계속 해왔으며, 미국은 북한에 모든 핵 시설과 핵프로그램, 핵물질, 확산 활동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추구해왔다.

미국이 강조해온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UFP)’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었고, 북한측 신고에 이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큰 관심사였다.

북한은 그러나 우라늄 농축 핵 프로그램을 줄곧 부인해왔으며, 미국측이 증거로 제시하는 알루미늄 튜브의 대량 구입도 핵개발을 위함계 아니라 평화적 용도라고 반박해왔다.

북한은 이런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에 알루미늄 튜브까지 넘겨줬으나 여기서 농축 우라늄의 흔적이 발견됨으로써 거꾸로 의혹만 커지게 된 것이다.

◇기रो에 선 북핵 협상=당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북한이 기존 입장을 바꿔 우라늄 농축 핵프로그램의 전모를 시인하고 이를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방법은 미국 전문가들의 추가 분석을 통해 북한이 건넨

알루미늄 튜브에서 검출된 농축 우라늄 흔적이 핵개발과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우연히 묻어 들어간 것임이 규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현재로서는 그리 쉬운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측 추가 검사에서 흔적물이 핵프로그램을 입증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은 우라늄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더욱 강력한 해명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그대로 신고한다면 북핵 협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로 드러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핵프로그램의 존재를 계속 부인할 경우, 북핵 협상 전반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힘겨운 협상 끝에 핵 신고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북핵 협상은 돌출한 ‘알루미늄 튜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자칫 과국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갈림길에 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연합뉴스

北 “남북협력의 대세 유지” 기대

남측 대선 결과 공식반응 과거 비해 늦어

북한이 남측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북간 행사에 나오는 북측 관계자들이 ‘남북협력 대세론’을 강조하면서 남북 협력관계의 지속을 바라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23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협약의 사후 조준공식예행식에 참석, 사석에서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해 “남북협력의 대세가 바뀔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크고 작은 남북 당국자 회담에 나오는 북측 실무자들도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호·불호 표정은 삼간 채 남북협력 대세론만 피력하고 있다는 전

문이다.

권호웅 참사의 말은 남측에서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져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알 수 없는 초조감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존 정부 정책의 큰 골격은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바람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이 일관적인 해석이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문제를 논의할 서해지대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는 28~29일 개성에서 열리게 된 것도 북측이 ‘남북협력의 대세’를 남측의 새 정부측에 확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12월 초 서해추진위를 개성에서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측은 “일이 많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은 대선 직전 전격적으로 18~19일 회담을 갖자고 제의해

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시기적으로 민감한 점 등을 감안해 대선 후인 28~29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남측의 정세를 지켜보던 북측이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적극 추진해 모멘텀을 만들어 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장관급이 회담 수석대표를 맡을 것인 만큼 북측이 회담에서 남측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탐색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가 끝난지 나흘이 지난 23일 오전까지도 북한 언론매체가 남한 대선이 실시된 사실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북한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대선 2~3일 후에는 선거 결과를 보도하고 간단한 논평을 곁들이기도 했었다. /연합뉴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확정

“백수시원서 물입니다. 그린 달성서 푸른수정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적벽입니다.”

The Living Ocean and Coast

EXPO 2012 YEOSU KOREA